

이 연구는 2012년 경상북도의 학술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지방분권 지식정보기반 발전방안 연구

2013. 2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제 출 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분권 지식정보기반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2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 창 용





■ 책임연구원 : 김영철 계명대 교수, 경제학

■ 공동연구원 : 김규원 경북대 교수, 사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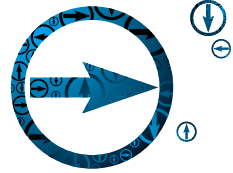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연구보조원 : 서은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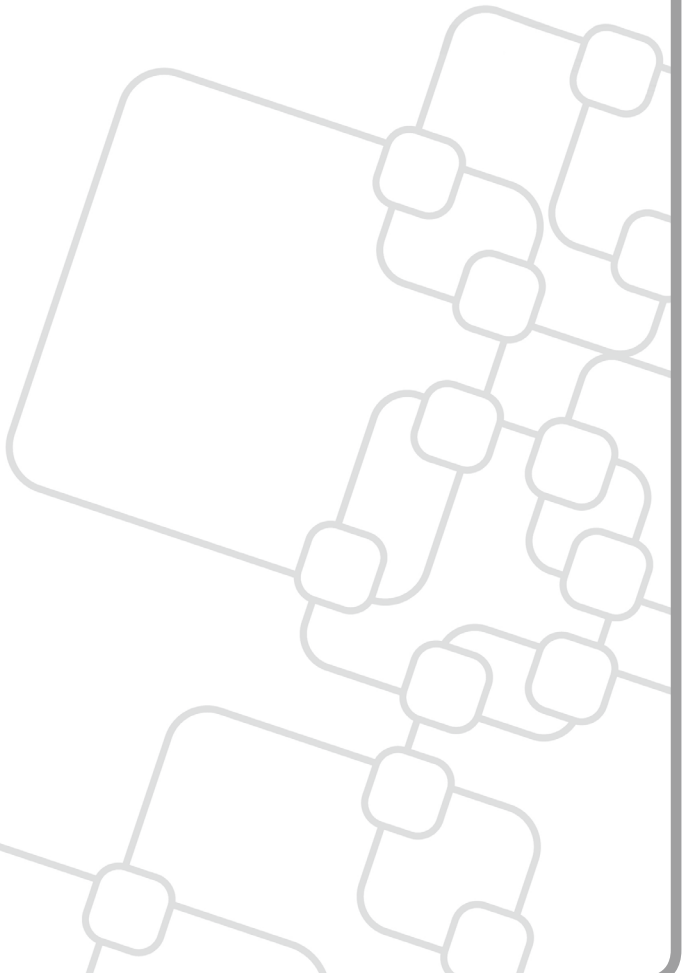
I . 지방분권 발전 비전	1
II . 지방분권 발전 대안	17
□ 경북 발전을 위한 신사회협약	19
□ 경북 로컬 거버넌스 구축	24
□ 남부권 교육지식벨트 구축	27
□ 대학컨소시엄 구축	28
□ 국제교육교류센터 건립	30
□ 대구경북학 등 지역사회연구 활성화	31
□ 지방공무원 수급체계 개선	32
□ 지역의 국공립대학등록금 인하정책	34
□ 초중등교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35
□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방과후 활동	36
□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	37
□ 광역전철망 구축	41
□ 내륙형 지식-문화-생태벨트 구상	43
□ 인적자원개발원 설립	45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47
□ Youth Plaza 건립	49
□ 지방분권 개헌 추진	50





I

지방분권 발전 비전



I. 지방분권 발전 비전

1. 경북은 어떤 지역을 지향해야 하나

경북이 사람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창조 지역, 교육 지역, 생태 지역, 글로컬 지역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으로 경북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가. 창조 지역 (creative region)

- 창의성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실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 창의성의 원천인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철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비판정신을 시민들이 가지도록 인문정책을 실시해야.
-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관용하는 지역 : 이질성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이방인 중용정책을 펴야. 진정한 'Pride Gyeongbuk' 실현
- 보헤미안 지수를 높이자: 화가, 음악가, 작가, 배우 등 자유로운 영혼과 유목적 경향을 가진 문예인(Bohemian)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 만들기
- 학습 공동체와 지식공동체 건설: 독서운동과 지역 도서관 확충

나. 교육 지역 (edu-region)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 '경북창의력학교' 설립.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결합

- 대학주도 발전모델(University-Led Development Model) 구축 :
산학협력, 관학협력, 민학협력 체제 구축. 연합대학체제, 대학간 컨소시엄 구축,
대학-고교 연계 교육체제. 대학혁신
- 과학문화체험 공간 확충 : 전국최고수준의 과학관 설립 운영
- 경북자연사박물관 건립
- 평생교육체제 확립: 노사정민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체계적 실시

다. 생태 지역 (eco-region)

- 저탄소 녹색경제(low carbon green economy) 실현 추진 : ‘탄소제로’ 지역 지향.
탄소 감축 계획 수립과 녹색산업으로의 경북산업구조 전환 계획 수립.
- 녹색공동체 설립 장려 : 마을 공동체 단위
- 생태주의적 지역 설계 :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원칙 구현. 생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 녹색 빌딩
- 생태주의적 생활양식 함양 운동 :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 ‘음식쓰레기 제로’운동 등
- 도시 농업 개발

라. 글로컬 지역 (glocal region)

- 다양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캐치 업(catch-up)
- 민간부문 국제행사 집중 지원
- 경북국제교류센터 건립

- 동아시아 공동체 (East Asian Community) 지향
- 지역문화의 글로벌화: 경주, 안동의 불교, 유교, 동학 사상, 문화의 집대성. 선비 사상의 세계화
- 경북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이야기가 있는 경북 역사문화 재발견 : 경북역사박물관 건립

2. 경북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21세기 선도 산업인 지식기반 녹색산업과 사회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현재 주력산업인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철강산업을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해야 함

가. 성장 동력: 대학, 중소기업, 여성

- 대학: 지식 창출,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 선도
- 중소기업: 혁신적 중견기업과 사회적 기업
- 여성: 최대 미활용 성장 잠재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공공보육 시설 확충. 여성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여성할당제 도입, 남성 소비니즘 극복. 양성 평등위원회 설치
- 3대 성장동력 집중적 강화 프로그램 제시

나. 일자리 창출

- 지역종합고용계획 수립

- 인적자원개발원 설치
- 청년 및 여성 전문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 복지공동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3. 초광역경제권과 문화권 구축

가. 초광역경제권 구축

- 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 초광역경제권위원회 활성화: 공동발전기획단 설치
- 재정분권 획득
- 산업자치 여건 구비: 지역경제정책전문가 양성
- 지속가능발전 모델 실현

나. 도농간 순환과 공생시스템 구축

- 초광역경제권 구축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
- 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 구축

- 지역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

다. 경북문화권 구축

- 문화인프라 공동 구축
- 문화컨텐츠 공동 창출
-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 전통문화의 현대화 작업
- 영남문화의 허브로 위상 정립
- 대구연계 관광시스템 구축

4. 지역공동체 건설

지역공동체를 세 가지 차원에서 건설해야 함

가. 복지공동체

- 사회적 기업 중심 육아, 양로,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의 지방분권과 복지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 전제

나.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센터 중심
- 생태주의적 생활양식 함양

다. 지식공동체

- 대학 기반 지식네트워크 구축
- 주민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5.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도민이 함께 설계하는 경북: 발전 비전 공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민 사회적 합의
-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참여 지역계획
- 직접민주주의 도입: Town Hall Meeting 정례화

6.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민행동규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와 협력경제(cooperative economy)와 녹색경제(green economy)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북 발전을 위한 창조적 파괴를 하는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민행동 규범을 보다 많은 지역민이 실천해야 한다.

- ① 이방인을 환영하자.
- ② 괴짜를 포용하자.
- ③ 문예를 진흥하자.

- ④ 여성을 존중하자.
- ⑤ 기술자를 우대하자.
- ⑥ 현장을 중시하자.
- ⑦ 모험을 장려하자.
- ⑧ 패자를 격려하자.
- ⑨ 협력을 권장하자.
- ⑩ 생태계를 보호하자.

7. 사회적 협약과 거버넌스

가. 사회적 협약의 의의와 사례

○ 사회적 협약의 배경과 의의

- 사회적 협약의 고전적 정신은 중세 계몽시대 이후의 사회계약론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는 바, 개인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스스로 일정 부분의 권리를 공동체 단위에 양도함으로써 그 대표성의 권위를 담보하여 개별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원리임.
- 20세기 말엽에서 사회적 협약의 개념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기초로 하여 주로 경제 주체들 사이의 협치 형태로 구현되었는데, 흔히 노사정협의체가 그 구체적인 성과로 알려지게 됨.

-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복지재정의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 기업, 노동계가 임금상승자제를 통하여 고용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인정 및 상생을 추구한 것이 사회적 협약의 주된 내용임.
- 하지만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험에 따라 사회적 협약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는 형편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협약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일반 노동자와 소비자에겐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로 귀결되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짐.
- 「노동의 종말」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사회 협약(a new social contract)’을 주창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의 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퇴출된 인력들이 새로운 지식경제 부문이나 해외시장에서의 인력수요보다도 훨씬 넘쳐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업률 상승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해결책 강구가 긴요하다고 봄.

○ 성공적인 사회적 협약의 선례

- 사회적 대화 모델의 위력은 이미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ccord)과 1987년 이래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으로 입증된 셈임. 네덜란드는 이 협약을 통해 저성장, 고실업, 재정적자 누적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약 고성장, 고고용으로 국면을 전환하여, 이른바 ‘和蘭病(The Dutch Disease)’ 환자가 ‘화란의 기적(The Dutch Miracle)’을 일으켰다고 평가됨.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매 3년마다 새로운 사회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 인상의 자제, 생산성 향상, 외국 자본의 대량 유입, 고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과거 오래 동안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회협약을 통해 면모를 일신하였고, 영국보다 앞서 1인당 소득 3만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이것을 기념하여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는 Dublin Spire라고 하는 뿔족한 기념탑을 세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게 됨.

나. Local Initiative 에 기초한 신사회협약의 내용과 방향

○ 로컬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 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전지구적 체계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분업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중심지역은 주변지역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이러한 외부의 지배세력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착취와 수탈이 자행되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동원하는 전통적인 적응방식은 도덕경제(a moral economy) 또는 생존경제(a subsistence economy)를 영위하는 것이었는데, James Scott에 따르면 항거의 수단은 개인적 나태함이나 은닉 등 제한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았음.
- 대부분의 근대화 과정은 개인 차원의 심리적 동기부여인 성취의욕을 자극하고 자본축적을 위한 근검절약의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부문간 불균형발전을 감수 하더라도 전통부문을 희생하면서 근대부문에서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었음.
- Thomas L. Friedman의 「세계는 평평하다」에서의 분류대로, 세계화 버전3.0시대인 오늘날에서는 ‘도매급개혁’보다는 ‘소매급개혁’이 요청되는 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대체불가능한 개인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즉 국가가 주도했던 세계화 버전1.0시대, 기업이 주축이던 세계화 버전2.0시대와 다르게, 지금은 혁신적 주체로서의 개인 집단에 주목해야 할 때임.
- Richard Florida의 ‘창조도시론’ 역시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창조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지역경쟁력 확보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내용임.
- 따라서 자기 지역을 세계변화와 사회혁신의 중심으로 삼는 로컬 이니셔티브의 주체 세력을 배양하고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 버전3.0시대에서의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이 세계체제상 중심부 위상을 차지하는 첩경임. 이는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이 로컬 이니셔티브를 핵심개념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로컬 이니셔티브에 기초한 신사회협약의 필요

- 과거의 사회적 협약은 스웨덴 등 북유럽 중심의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를 지닌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반면에, 신사회협약의 등장은 중앙집권적인 교섭구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이원덕 2004).
- 과거의 사회적 협약은 주로 복지국가모델에서 임금인상-물가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임금인상완화 등 노사정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음.
- 1990년 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사회협약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주된 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화, 작업장 혁신과 더불어 직업훈련과 일자리창출의 연계, 사업장에서의 협력과 참여증진 등 실질적인 경제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가치에 대한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로컬 이니셔티브에 기초한 신사회협약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신사회협약의 방향과 과제

-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과거 근대화과정에서는 경제성장우선주의, 수출지향적 산업화전략(a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도출되었는데, 지금 탈근대화 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민적 합의가 밑으로부터의 혁신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화 수준의 향상 못지않게 급상승한 민주화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앙집권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고비용저

효율성을 면하기 어려움. 특히 복지와 배분에 대한 요구 수준이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문제해결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다시 야기하는 악순환구조를 낳게 됨.

- 복지와 배분에 입각한 과잉 민주화 요구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해당 이해당사자 집단의 공동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이 신사회협약의 핵심내용이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신사회협약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조가 요청되며, 자율과 책임, 소통과 신뢰, 창의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신사회협약의 내용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이는 지역 내부에서 풀뿌리운동단체를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한 참여자 또는 적어도 파트너로 자리 매김해야 함을 의미함.

다. Local Governance의 구조와 기능

○ 지역 거버넌스의 두 유형

-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유형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음.

	Region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참여주체	법령에 의거한 주요 기관의 장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 또는 그 대리인들
구조적 특성	대표자의 모임과 실무자의 모임 이원화 구조, 위계서열적인 단층구조	중층적 형태의 수평적인 위계구조
기능기대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협치	의사표출 및 합의도출: 공동문제해결실행
대표사례	지역개발청(RDA)	지역축제조직위원회

- 두 가지 거버넌스 유형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행정조직 토대의 통치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 작동 기제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네트워킹 구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임.
- Regional Governance는 참여 주체가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주축으로 구성되는데 비해서 Local Governance의 참여 주체는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이거나 그 직접적인 대리인(representatives)들로 구성됨. 곧 참여 주체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의 모임임.
- Regional Governance와 Local Governance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구조적 특징과 기능 기대(functional expectation)¹⁾에서 드러나는데, 전자는 대표자의 모임과 실무자의 모임으로 이원화된 구조로서 상하 위계서열적인 단층구조의 특징을 지니며 그 기능 기대가 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치를 달성하는 것임에 비해서, 후자는 이해당사자가 여러 겹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열려 있는 중층적 형태의 수평적인 위계구조이며 기능 기대 또한 이해당사자들마다 의사표출을 통하여 공통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문제의 해결을 실현하는 것이고 더 바람직한 기능 기대는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심지어 공동의 비전까지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Regional Governance는 다루는 의제가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에 상대적으로 Local Governance의 의제는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는 만큼 거버넌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열의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권익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여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Local Governance의 성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
- Regional Governance의 대표적인 예는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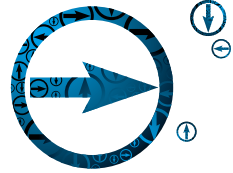
1) 개인 차원에서 지위에 걸맞은 역할 기대(role expectation)가 있듯이, 조직이나 제도 차원에서는 그 구조에 걸맞은 기능 기대(functional expectation)가 있음직하다고 본다.

Agency)을 들 수 있는 반면에, Local Governance의 대표적 예는 흔치 않은데 ‘지역축제조직위원회’ 정도를 들 수 있음.²⁾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Local Governance의 우리 지역 사례는 대구지하철참사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당 될 수 있음.

○ 우리 지역의 Local Governance 구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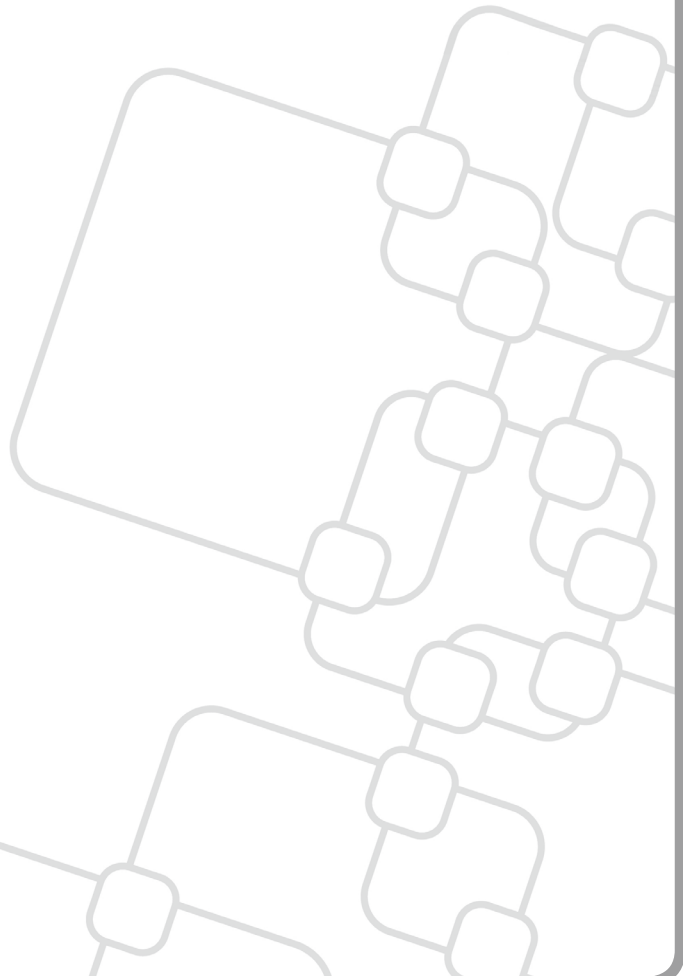
- 대구 지역은 기층민들의 자존심과 조직역량이 강한 곳인데,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세간의 평임.
-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기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곤란한 정도로 강고하다는 것인데, 다만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새로운 자기중심을 세우려는 의지를 결집하는 지도력 발휘가 아쉬운 실정임.
- 폐쇄적이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기이해와 동일한 사람들끼리 집단조직을 형성하면서 자기이해와 같지 않은 사람들 또는 미처 자기이해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인데, 이는 자기이해의 범주를 확장하거나 익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이 주어질 때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지역민의 조직역량을 순기능적으로 최대한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청됨.
- 지역거버넌스 구조를 해당 의제에 따라 기초, 광역, 초광역의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참여시키되, 중첩적으로 수평적인 위계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임.
-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권을 향유하고 해당 의제에 대한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수혜자라는 점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함. 곧 신사회협약의 주체로서 지역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수혜자 역시 이해당사자들이어야 함.

2)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Local Governance를 지향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이전에 MB정부 들어서서 자진 해산한 바 있음.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지난 해 출범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이러한 Local Governance의 원형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할 것임.



Ⅱ

지방분권 발전 대안



II. 지방분권 발전 대안

□ 경북 발전을 위한 신사회협약

가. 경북의 혼과 신사회협약

○ 경북 정체성의 근간

- 경북은 한국전통문화의 보고이자 한국 정신의 혼을 수호하고 계승하는 고장임.
- 유불선을 융합한 신라의 정신인 풍류도와 그 수련인 단체로서의 화랑에 대한 자부심을 견지함.
- 호국불교의 정신과 유학 선비의 지조와 충효 사상 역시 경북의 혼을 형성하여, 국난 시에 수많은 의병과 독립투사를 배출한 지역임.
- 경북의 혼은 문명사의 전환기에는 새로운 정신 사조를 창출하여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승화될 경우에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못할 때 망국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원광의 세속오계는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고, 퇴계의 가르침은 유학정치질서의 토양이 되었으며, 수운의 동학사상은 개화기 국난을 극복하려는 동력을 제공하였으나 구한말 국가 지도이념으로 승화되지 못하여 결국 외세침탈의 비운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음.

○ 경북 정체성의 개화

- 우리나라 산업화가 경북 지역민과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멸사봉공과 상부상조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헌신하는 것을 당연시 해온 경북의 혼이 발현된 것임.

- 특히 근대화과정에서 경북의 혼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음.
-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탈전통사회를 지향한 운동이었지만, 지금 세계화시대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은 서구의 근대화기획이 노정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체제 모색과 연관되고 있음. 곧 생명과 휴먼 중심형의 도덕적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21세기의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생태적 순환사회 구축을 위하여 경북의 혼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운동으로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오늘날 사회트렌드를 드러내는 가치 개념들 가운데, 느림의 미학, 웰빙의 구현, 로컬푸드와 친환경유기농(식생활 관련 키워드), 천연염색과 천연소재(의생활 관련 키워드), 천연재료와 자연친화적 전원주택(주거생활 관련 키워드), 그린에너지(태양, 바람, 조류, 바이오 등) 등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경북의 혼과 전통문화의 특질과 일맥상통하여 아주 친화성이 높음. 경북의 혼을 인류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서, 유럽과 미국주도의 근대화문명을 초월하는 대안문명의 발상지로서의 경북을 자리 매김하는 것이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사명이라고 할 것임.

○ 신사회협약과 새마을운동

- 기본적인 의식주 마련을 통한 생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라 살리기를 주도했던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일종의 사회협약이었음.
- 이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품격 높은 생활의 질적 문제를 추구하는 시대로 들어선 만큼, 그리고 단순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동포,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 살리기를 주도함이 중요한 만큼, 생활세계에서의 혁신을 통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자원활용과 인류공동체의 도덕적 이상을 이 땅위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신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이어야 할 것임. 이처럼 ‘인류가 다 같

이 잘살아 보세’라는 신사회협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새마을운동은 ‘나라 살리기’를 뛰어넘어 ‘지구 살리기’, 곧 ‘온 세상 살리기’로 나아가야 할 것임.

나. 인적 자본투자의 방향

○ 현행 인적 자본투자의 한계 상황

- 서구식 근대화의 제도적 산물인 현행 교육체제는 내재적 발전보다는 외부지향적인 의존방식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현실임.
-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경쟁력은 경북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선진국 지역이 확보한 상태이므로 아무리 따라잡아간다 해도 잘해야 2등 수준이며, 이러한 교육의 성과 역시 지역환원이 되지 못하고 인재유출만 심화되어감.
- 그 여파에 의해 경북 일원의 대학기관은 향후 10년 이내에 정원미달사태로 인하여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됨

○ 지역정착형 또는 지역회귀형 인적 자원 양성

-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경북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은 역내에 세계적 대학 기관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원칙임.
- 수도권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레드 오션)에서 같이 경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 또는 독특한 분야(블루 오션)에서 역량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 우리 지역의 대학에 우리 지역출신 인재들이 몰려들고, 나아가 외부에서도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대학의 특성화가 중요함.
- 서세동점의 시기인 구한말에 쟁점으로 등장했던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교육의 내용과 가치, 목표는 우리 경북의 혼과 전통문화에서 찾고, 그것을 보편화하는 학문적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은 서구의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곧 세계

화 시대에서 학문이나 인력이나 제품이나 그 시장적 상품성을 도외시킬 수 없음.

-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면, 현행 농민사관학교를 실질적인 농군사관학교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과거의 국방 개념에서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각 군별로 양성하는 것이 사관학교인데, 미래의 국방 개념으로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군 엘리트를 4년간 전액 국가지원으로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농장에 근무하게 하는 농군사관학교를 경상북도 지역 안에 설립하게 함. 교과내용은 농촌지역개발을 비롯한 인문 사회경영 교과목들과 각 작목 재배기술 및 영농기술 중심의 교과목들로 편성하는 것임. 그리고 교양교과목으로는 주로 우리 경북의 혼과 전통문화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임. 더 욕심을 낸다면,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전 세계적인 새마을지도자 양성과정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임. 즉 글로벌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 양성의 메카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그리고 가칭 ‘한국전통문화대학’을 설립하여, 경북의 혼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 전통생활양식, 생태환경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음. 각종 무형문화재 전수 역시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가능하면 전통의술과 한의학까지 포함하여 종합대학 체제로 편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이러한 두 가지 큰 제도적 틀에서 양성된 인력을 기존의 산학협력(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내용 포함)이나 평생교육(칠곡군 사례), 대학협력(경산시 사례) 등에 접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다. 사회적 투자와 지역 공동체 재생

○ 지역정착 및 지역회귀를 위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

- 현대 도시문명의 과열 경쟁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 가운데 이미 귀농이나 적어도 전원주택생활을 선택하고 있음.

- 남들 따라 죽을 둥 살 둥 더 이상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경북에 가서 살면 ‘살판난다,’ ‘신나게 산다,’ ‘보람찬 생활을 한다’ 등 탈현대적 의미의 행복을 구가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이미지가 필요함.
-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근대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오히려 전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고 그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에 경북이 앞장서는 것임.
- 공장부지 건설이나 아파트형 주거단지 조성, 고속주행 자동차 도로 및 교량 건설 등과 같은 근대화 유형의 SOC 투자를 지양하고, 숲 조성, 전원주택, 연구기관유치, 문화예술창작 작업실, 자전거도로망 확충, 대도시와의 철도망 연결, 휴양을 위한 레포츠 시설, 연극 및 뮤지컬 공연장 등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서 탈현대화 유형의 SOC 투자를 지향해야 할 것임.

○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형성 방안

- 새로운 인간 관계망 형성을 위한 투자의 방향과 사례
- 그린행복 커뮤니티 구축, 에너지 폐기물 하천관리, 마을만들기 시스템
- Local Food, 도시농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사회적 경제 구축
- 서울시의 공유도시 프로젝트의 사례

□ 경북 로컬 거버넌스 구축

가. 새마을 운동의 전개와 Local Initiative 구현

○ 새마을 운동의 거버넌스 특징

- 70년대 경북을 발상지로 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그 당시 수준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것인데,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는 국민동원전략으로서의 Top-down식 관료주도 형태가 아니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Bottom-up식 민간주도 형태도 아니었음.
- 통치권자의 비전으로 국민자발적인 지역개발활동(경북 청도군 신도마을)을 인정해준 것이 단초였으며, 그 이후에 마을 단위(경북 기계면 문성리)에서 순수 민간 지도력을 기초로 자발적인 계획과 자체 역량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정부가 크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하기에 이른 것임.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쪽으로 정부주도나 민간주도가 아니라, 관과 민이 지역발전이 곧 개인발전이라는 공통의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민이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자발적인 노력을 보일 때 관이 이를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된 운동이었음.

○ 로컬 이니시어티브 인정의 중요성

- 현재에도 각 지역이나 각 영역에서 기존의 지식패러다임으로는 간과하기 쉽지만 제 나름대로의 필요와 체험으로써 진행되는 풀뿌리형 주민활동을 주목해야 함.
- 진행중인 다원화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러한 로컬 이니시어티브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의 도정이나 시책에 부합하는 활동에 국한지어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서 각 지역과 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 중심으로 문제해결형 지원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새마을 운동형 거버넌스의 복원

○ 새로운 새마을운동에 적합한 거버넌스의 모색

- 과거의 로컬 이니셔티브형 지원방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러한 로컬 이니셔티브를 견인하거나 발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기존의 새마을지도자의 고령화 및 역량이지 감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사회협약 차원에서 글로벌 새마을운동에 적합한 새로운 새마을지도자 양성이 필요함.
- 앞서 인적 자본투자 방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질적인 농군사관학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인적 자원을 양성하여 활용할 것을 재차 강조함.
-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과거의 농촌계몽활동과 다르게 자신의 마을 만들기, 그리고 세상 살리기 차원에서 기성세대의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현안 관련 이해당사자들로서 Local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70년대 새마을 운동 전개 당시에도 마을마다 전승되어온 어르신들의 동네 사랑방 회의가 의사결정기구로서 작동하였듯이,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복원하여 계승하는 것이 중요함.

다. 경북형 Local Governance 구축을 위한 과제

○ 이해당사자들의 인정 문제

-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의 중추를 형성했다는 자부심이 많기 때

문에, 경북 지역에 과연 탈현대적 지역발전 의제를 채택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들의 핵심역량이 언제 갖춰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새마을 운동의 초기과정에서 시사 받듯이, 이는 지도자의 비전 여부와 그에 부합하는 조그만 로컬 이니시어티브라도 어떻게 인정해주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임.
- 대형 사업 수주라든가 외부자본 유치 실적 등 전시행정효과에 기대하는 근대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한, 새로운 로컬 이니시어티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되어짐.

○ 관의 바람직한 역할

- 관 주도의 사업 추진을 본연의 임무라고 여기기보다는 현장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에 필요로 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함.
- 발굴한 의제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신사회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이른바 ‘조력자’와 ‘안내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향후 과제임.

□ 남부권 교육지식벨트 구축

○ 필요성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실정임
-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은 '집단지성'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첨단과학기술벨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지식벨트를 구축하려는 것임
- 대구경북권과 광주권을 연결짓는 내륙벨트와 부산경남권과 전남권을 연결짓는 해양벨트를 하나의 남부권벨트로 구축함
- 구체적으로 남부권의 주요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인적교류 및 자원공유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둠
- 초광역벨트의 시각에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 유치, 집행을 공동 협력하여 추진함

○ 재원 확보방안

- 중앙예산 확보 및 지자체 예산

○ 기대효과

-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내 지역간 상생 및 화합 도모 기대

□ 대학컨소시엄 구축

○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지역발전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산업·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들의 R&D 및 인재 양성에 투자가 필요함
- 개별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대학은 현재 지역 사회와 고립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는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역 경제의 핵심과제임
- 지역 대학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앵커 기관으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교토대학 컨소시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49개의 대학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토시 및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경영자협회, 공업회 등 교토시의 주요 경제단체들이 가입하고 있음
- 이를 벤치마킹하여, 먼저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상호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예컨대 외국인학생유치선발 및 관리 등에서부터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 경험을 축적함
- 지자체는 참여 대학들에게 각종 사업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종의 패키지 형태의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공함

- 대구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 상호간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 대학 상호간 협력의 장을 확보함
- 대학컨소시엄은 우선적으로 외국 유학생 공동관리, 대학공동축제 등 쉽게 협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동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앵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사례를 축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대학컨소시엄은 공동직업 훈련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센터 공동 설립 등 지역 대학 졸업생의 지역내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임

○ 재원확보방안

- 지자체의 각종 R&D 사업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함
- 지역의 여러 경제단체에서 지역대학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 각종 지원금

○ 기대효과

- 지역의 대학별 특성화 및 인력양성 역할 차별화 기대
-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간의 신뢰기반 장기협력체제 구축 가능
- 지역대학의 지역 사회와의 밀착도를 높임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영의 관계를 확립함
- 지역대학의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 지역의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함
- 지역대학의 경쟁력 및 위상 제고와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 해결에 일조함
-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내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세계화에 기여함

□ 국제교육교류센터 건립

○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OECD회원국으로서 대외원조 부담금이 증가일로에 있는 바, 이를 국익향상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 저소득국가출신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 특히 EFL 교육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내외국인 교사들의 연수 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교과부 예산)

○ 재원확보방안

- 교과부에서 기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거나 신규 예산으로 확보
- 지자체 및 관련 교육청의 매칭펀드 조성이 관건임

○ 기대효과

- 지역대학 안의 우수고급인력의 전문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지역내 관련 업무의 고급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대구경북학 등 지역사회연구 활성화

○ 필요성

-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발전 비전 수립이 급선무임
- 지역사회연구는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함

○ 추진 내용

- 대구경북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를 진행함
- 학제간, 융합학문적 성격의 지역사회연구를 지향함
-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학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주요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괄한 공동연구를 추진함

○ 재원확보방안

- 지자체의 예산지원 확보
- 지역대학의 학술연구지원 활용

○ 기대효과

-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의 인력풀 형성이 가능할 것임
- 지역 내 전문가들의 지역밀착형 연구 성과 축적을 기대함

□ 지방공무원 수급체계 개선

○ 필요성

-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간, 도시간 경쟁에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역량이 곧 그 지역의 세계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실정임
- 지역사회의 정책개발, 입안,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역량 제고가 절실히 필요함
- 특히 대구경북지역민들은 근대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함. 하지만, 21세기 탈근대화 과정에서는 오히려 ‘보수성’과 ‘배타성’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요청됨

○ 추진 내용

- 지역사회와 지방공무원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임용시험과목과 면접방식 등을 대폭 변경함
-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및 보직순환, 직무재교육 등의 내용과 방식을 대폭 변경함
- 신규임용 및 승진, 직무평가, 재교육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관련 전공학문 분야의 대학교수를 활용하는 것임(추천서, 수강강좌내용, 이수학점, 집단면접 등에 대한 평가 참여 교수의 pool을 확보하여 익명의 무작위 추출 가능함)
- 지역대학의 교과과정(학부 및 대학원)에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수하거나 실습하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책 강구

○ 재원확보방안

- 기존의 인사제도 운영비를 활용하고, 지방대학 지원금을 증액 편성 권장함

○ 기대효과

-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생구조 형성 및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
- 지방공무원의 역량제고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함

□ 지역의 국공립대학등록금 인하정책

○ 필요성

- 수도권으로의 우수 지역인재 유출이 심각한데, 그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진학생수 증가 문제가 심각함
- ‘반값등록금’이슈가 제기되면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 납부 반환 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국공립대학의 존립위기감이 확산됨
-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의 맹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독일처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화하든지, 아니면 미국 주립대학처럼 해당 주의 주민들에 대한 등록금과 다른 지역거주자에 대한 등록금을 차등화(in-state fee vs out of state fee)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국공립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함

○ 재원확보방안

- 현행 ‘국가장학금’재원을 활용하여,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
-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포함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지원방식은 지역인력수급에 적합한 형태의 대학혁신을 유도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인재 이탈 방지 가능함
- 지역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와 지역사회의 인력수급체계의 mis-match를 줄여갈 수 있음

□ 초중등교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 필요성

- 교사로서의 자긍심 회복 및 강화(한국형 teachers' empowerment)를 교육개혁의 핵심 사안으로서의 의제 설정
- '교육지역'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하여 교원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지역민의 존경심을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

○ 추진내용

- 공교육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초중등교원에 대한 사기진작프로그램 도입에서 마련함
- 사기진작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의 제도화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함
- 교원의 직급체계를 개선하여, 다단계화하면서 합리적인 승진기준에 의거하여 승급 가능케 함
- 수업 및 직무에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잡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인력(조교)를 확충함

○ 재원확보방안

- '교육세' 부과에 의한 재원확충
- 기존의 각종 비교육적인 승인사업(로또, 경마, 카지노 등)에 의한 수익 일부분

○ 기대효과

-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사교육비 절감
- 실질적인 창의성 및 인성 교육 시행 가능성 증대

□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방과후 활동

○ 필요성

- 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에 따른 방과후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이 발생하고 있음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주말과외를 위해서 서울 유명 사설학원에 다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추진 내용

- 방과후 활동을 주말로 연장하여 시행하는데, 예체능중심의 인성 교육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미국의 사례처럼, 학부형의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단위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방과후 활동을 조직함

○ 재원확보방안

- 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지원 사업비를 활용함
- 참여학생들의 학부모 부담금(소액의 실비: 유니폼 구입비 또는 그림물감 및 악기 구입비 등)

○ 기대효과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가치의 탈현대적 복원 가능
- 학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통한 인성 발달과 체력 보강 효과

□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

○ 필요성

- 세계경제체제는 국가간 경쟁에서 광역경제권간 경쟁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글로벌화로 국경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혹은‘초광역’경제권이 경쟁을 위한 적정 공간단위로 역할을 하게 되었음.
- 일반적으로 광역경제권(mega-city region)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1일 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공간적 단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역경제권이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적정 공간단위임.
- 대경권(대구, 경북)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영남권은 1,320만명의 인구를 가진 초광역경제권이며, 여기에다 호남권 인구 525만명을 합치면 남부권 인구는 1,850만명에 달함.
- 인구 1,000만명 이상의‘광역’혹은‘초광역’경제권이 경쟁력을 가진 공간단위가 되기 위해서 ‘하늘길’의 확보는 필수
- 전통적인 중공업제품의 국제물류 처리를 위해서는‘바다길’(해운)이 필수이지만, ‘경박단소형’첨단산업제품의 국제물류 처리를 위해서는‘하늘길’(항공)의 확보가 필수
-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광역경제권에는 국가관문공항이 반드시 있음.
- 일본의 제3관문공항인 류부공항이 속한 토카이지역(아이치현을 포함한 4개 현)은 1,470만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 영국의 제2관문공항인 맨체스터공항이 속한 초광역경제권(7개 광역지역)은 1,1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있으며, 프랑스의 주요 관문공항인 리옹공항이 속한 초광역경제권(6개 주로 형성)은

1,140만명 정도의 인구가 있음.

-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세계항공운송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2006년부터 항공운송자유화 협정의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비용 항공사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국가들이 허브(hub)노선의 비중 축소와 직항(point to point)노선의 비중 확대를 예상하고 1국 1강(허브) 공항체계에서 다핵공항체계로 변화를 시작
- 영남권에는 현재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은 군사공항 우선의 공항 운영과 소음문제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짐.
- 김해공항은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2020년, 활주로는 2025년에 포화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김해공항은 활주로 길이(연장)가 짧고 지반이 약하여 대형화물기의 취항이 불가능한 한계도 가짐.
- 현재 우리나라의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One-Port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1억 2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의 경우 나리타, 간사이, 주부 3개 국제공항이 인천공항과 같은 중추공항 기능을 담당
- 최근에는 나리타 공항의 개항으로 그 위상이 하락한 바 있는 하네다공항까지 중추공항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 5천만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 하나만의 One-Port 국제공항(중추공항) 시스템으로는 국가경쟁력에 한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내용

- 새로운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논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남부권 신국제공항의 건설로 말미암아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음.
- 일부는 무안, 청주, 양양 공항 등 지방국제공항의 실패사례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남부권 신국제공항은 이들 실패한 공항들과는 규모와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점임.
- 남부권 신국제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민항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관문공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새로운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아님.
- 남부권 신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중추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 2020년 이후 인천공항 포화상태에 대비한 보완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인천공항 위기상황(천재지변, 재난, 이상기후 등) 발생시 대체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남부권 신국제공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남부권의 기존 국제공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신국제공항
 - 인천공항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2관문공항
 - 중단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우선하는 공항
 - 저비용 항공사 친숙공항
 - 남부권 공동발전의 구심점
- 남부권 신국제공항 개항 목표연도: 2025년
 - 국제공항 건설 소요기간: 통상 10년 정도

- 활주로: 연장 4,000m 활주로 2본
 - 1분을 먼저 건설한 후, 나머지 1분은 추후 건설 가능
- 입지 후보지는 국제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가능한 후보지들 가운데 항공수요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재원확보방안

- 국가기반시설이므로 100% 국비를 확보해야 함.

○ 기대효과

- 인천 국제공항을 제1관문공항으로 하고 남부권 신국제공항을 제2관문공항으로 함으로써 인천 국제공항의 위기상황(예: 천재지변) 발생시 신속한 대응 가능
- One-Port 국제공항(중추공항) 시스템에서 Two-Port 국제공항(중추공항)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남부권에 적정규모의 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남부권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획기적 기여
- 남부권의 기업유치와 관광객유치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광역전철망 구축

○ 필요성

- 대구와 경북의 거점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광역교통 인프라임.
- 대구 광역대도시권의 주요 도시간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는 거의 대부분 도로교통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수도권과 같은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광역전철망의 구축, 역사 및 역세권의 개발, 효율적인 환승체계(광역전철-철도, 광역전철-지하철, 광역전철-버스, 광역전철-승용차 등)의 구축을 통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대도시권의 발전잠재력의 극대화가 가능함.

○ 주요 내용

- 경부선이 2006년 12월 전철화 공사의 완료로 전철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공사(대구-부산 구간)도 완료되어 기존 경부선 구간에 선로의 여유용량이 확보되고, 기존 경부선 구간에 광역전철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대구-부산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구간인 김천-구미-대구-경산-청도 구간에 광역전철 운영이 가능하며, 동대구-하양-영천을 연결하는 대구선 구간도 광역전철망의 구축이 가능함.
- 수도권의 경우 서울-수원 구간의 광역전철을 서울-천안으로 확장하면서 통근(수원 영통, 안양범계, 천안 등의 공업지역), 통학(인근 27개 대학) 등 다양한 목적의 교통수요를 흡수하고 있으며, 화성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이 촉진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1단계: 첨단 IT 산업벨트 연결

- 구간: 김천-구미-칠곡-대구-동대구-경산-청도
 - 기존역: 구미, 약목, 왜관, 대구, 동대구, 고모, 경산, 청도(8개 역사)
 - 신설역(안): 원평, 북삼, 평리, 달성, 효목, 사월(6개 역사)
 - 환승역: 고모(광역전철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의 환승)
- 2단계: 지식경제자유구역벨트 연결
- 구간: 동대구-고모-하양-영천
 - 기존역: 금강, 청천, 하양, 금호, 영천(5개 역사)
 - 신설역(안): 동서(하양과 금호 사이), 도동(금호와 영천 사이)(2개 역사)
 - 환승역: 고모, 청천
 - 장기적으로는 경주, 포항까지 광역전철을 연결해야 함.
- 광역전철의 역사는 기존 경부선 상과 대구선 상에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기존 역사의 신설·정비·확충과 환승체계 구축, 새로운 역사의 신설 및 환승체계 구축, 역세권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재원확보방안

- 국가기반시설이므로 100% 국비를 확보해야 함.

○ 기대효과

- 생활권과 경제권의 광역화로 대구경북의 광역적 발전기반 구축에 기여
- 궁극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광역경제권 구축의 가능성 기대

□ 내륙형 지식-문화-생태벨트 구상

○ 필요성

- 대구경북의 입지적 특성상 초광역 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기존의 대구경북 경제권의 통합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되나, 광역행정단위의 관행에 종속되어 초광역경제권 형성의 획기적인 전환은 달성하지 못함
- 대구경북 경제권과 광주전남 경제권의 초광역 경제 통합 및 협력 구상은 산업화시대를 통해 형성된 수도권 중심의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경제패러다임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것임

○ 추진 내용

- 이명박 정부의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은 대구경북 경제권과 광주전남 경제권을 연결하는 내륙 벨트 구상이 제외되어 있음
- 이는 이명박 정부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이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구경북경제권과 광주전남 경제권을 연결하는 내륙 벨트 구상은 그동안 산업화시대의 수도권 중심 패러다임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21세기형 지역 발전 모델의 궁극적인 원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주 초광역 내륙벨트는 지식-문화-생태를 주요한 가치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벨트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구경북은 지식경제, 광주전남은 문화산업, 지리산과 가야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은 생태보호지역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개별 지역의 비교우위가 최대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있도록 초광역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내륙형 지식-문화-생태 벨트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탈산업화 지역발전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설계와 관련하여 논의 자체는 철저하게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함

○ 기대효과

- 내륙형 지식-문화-생태벨트 구상을 통해 대구경제는 후기 산업화시대의 낙후지역으로부터 탈산업화 지역발전모델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
- 대구 지역을 지식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의 확립은 대구 경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대구시민은 비로소 공유된 비전(shared vision)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됨
- 현재 대구 경제의 문제는 가동되는 프로젝트가 부재하거나 잘못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미래 비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내륙형 지식-문화-생태 벨트 구상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임

□ 인적자원개발원 설립

○ 필요성

- 대구경북이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임
- 그동안 지역 경제 정책은 주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관리되어 옴
- 지역 경제 정책이 산업정책에서 인적자원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원 설립이 필요함
- 대구경북의 노동시장은 하나의 통합된 노동시장으로서 인적자원 관리는 대구경북을 통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대구경북의 산업정책과 지역개발 정책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인적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과는 별개로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원의 설립이 필요함
-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원은 지역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생산과 평가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지역대학컨소시엄 등 지역대학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대학 졸업생의 ‘지역 내 안착’을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원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을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깔대기 형태로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원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업무 수행

- 지역내에서 수행되는 직업훈련과 주민 대상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훈련 및 교육 효과를 제고함

○ 기대효과

- 대구경북 경제의 지식산업기반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에 기여
- 대구경북 대학과 지역산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의 ‘지역내 안착’은 물론이고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 창출에 기여
- 지역내 새로운 고용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및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지역내 컨센서스 확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 필요성

- 중앙정부의 공동체 관련 사업은 지역에서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전 세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역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추진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 거버넌스구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동체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유일한 정책 목표로 삼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 공동체 형성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일자리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기대효과로 간주되어야 함
- 지역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도시농업, 로컬푸드, 생태교육 등 21세기 한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확산하고 이를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가교의 기능을 담당하여 함

○ 기대 효과

- 공동체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자본 형성에 기여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지역 사회가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되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의 역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음

□ Youth Plaza 건립

○ 필요성

- 대구를 청년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Youth Plaza는 일종의 청년을 위한 종합서비스 센터로서 학습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 취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 대구가 청년층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청년층 유출방지와 새로운 청년 인력의 지역내 유입을 도모함

○ 추진 내용

- 국채보상운동 공원내 중앙도서관 건물 혹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Youth Plaza 건립
- 청소년창의학교, 청년종합고용센터, 청년창업보육센터, 국제교류센터, 문화활동공간 제공 등 청년층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one-stop 방식으로 제공
- Youth Plaza 운영은 청년 재단 설립을 통해 거버넌스 방식을 도입함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지역내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역내 청년층 인구비율 증대
- 보수적인 대구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젊고,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이미지 확보
- 지역내 양질의 청년층 확보는 지역내 기업 유치에 기여

□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점점 심화, 반복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중앙정치에 넋더리를 내고 있어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 중앙집권은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키는 체제이며, 양극화문제 해결방안중의 하나인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체제임.
-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비수도권의 부와 자원이 유출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와 자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배분을 놓고 지방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지역으로 결정권 이양과 세원 배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예산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기획한 국가프로젝트에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 부재, 중앙정치권, 중앙언론계 등의 지방분권 마인드 부재로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에 기초한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상당한 지식정보화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적응하며 소통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산업화시대의 관점과 가치관에 안주하여 여전히 토건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만 관심을 갖고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발전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음.
-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탈산업화의 가치와 관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임.
- 우리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이행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중앙주도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킴으로서 국력 증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2만불시대에서 3만불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3만불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로 국민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불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영시스템의 후진성에 기인함.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한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도약이 불가능함.
-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각 지역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전체가 경쟁력을 가지게 됨. 일부지역만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서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는 없음.
- 대한민국이 2만불 국가를 넘어 3만불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서울수도권중심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기조와 방향을 바꾸어야 함. 지방분권은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임.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임.
-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서울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불균형 발전전략

을 고집하고 있음. 지식정보화의 외피만 입었을 뿐 여전히 중앙집권적 마인드로 국가운영을 하고 있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인 지방분권화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일을 하지 않을수록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뿐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
-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시스템혁신이 절실한 상황임. 정부시스템혁신의 방향은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한편으로는 글로벌지역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데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지역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고 정책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관료들이 정책 기획과 실행에 중앙집권적, 수도권중심적 패러다임에 갇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중앙집권적 입법, 행정, 사법, 언론으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없음. 대통령, 정부 고위관료, 여당 수뇌부, 언론 데스크들이 중앙집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임.
- 이제 이러한 상황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대안을 찾아야 함. 엄중한 현실에서 답을 구해야 함. 지역발전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아닌 헌법을 통한 분권개혁을 추진해야 함.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체제로의 이행을 시작해야 함.

○ 지방분권체제로의 이행

- 지방분권체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지방의 침체에 따른 국가발전의 지체와 지역간, 계층간 갈등심화에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지역에 줌으로써 지역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정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음.
- 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도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모델간의 경쟁을 통해 국부와 국력을 증진할 수 있음. 전국토의 창조지역화가 가능하며 탈산업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식정보화사회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며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정책을 구사함으로써 3만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우리가 지방분권체제 도입에 성공한다면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고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남북통일의 바탕이 되는 초광역정부 단위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중국과 일본에 앞서서 산업경제기반에서 지식기반경제기반으로의 이행한다면 가능함.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제도적 접근은 지방분권 헌법, 법률, 조례 제·개정을 통해, 문화적 접근은 주민참여, 민주주의의식, 지역주권의식 함양을 통해 추진함.
- 제도적 차원에서의 제1의 과제는 민주화 열망을 반영한 현행헌법을 선진화를

위한 지방분권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임. 민주주의를 심화 확대하고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함.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역정책 총괄부처 신설, 거버넌스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자치특별법’을 제정하여 개헌 추진을 뒷받침해야 함.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추진한다면 지방분권체제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문화적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민주주의와 국가비전 공유를 위한 범 국민적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풀뿌리지역주민들과 지역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음.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음.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나갈 수 있음. 지역주민의 의지와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할 수 있음.

○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 균형발전

-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준비해온 과정이 아니라 낡은 서울수도권중심모델에 뒤따르는 과정이었음.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중앙정치에 의존하고 예측되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취적인 자립의지를 상실해온 역사였음.
- 실패한 지방자치를 뒤로 하고 성공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의 힘에 의해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밖으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지역사회 합의에 의한 지역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함.
- 지역이 낡은 서울수도권모델에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지방분권적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함.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틀 안에서 지역발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기획해야 함.

- 지역발전은 경제와 사회의 동반발전, 인적자원개발중심 지역발전을 그 핵심내용으로 해야 함.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공동체사회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함. 공동체사회에 기반을 두고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 시장경제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공동체사회영역에서 치유할 수 있고 공동체사회영역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영역이 가지는 활기찬 역동성과 추진력을 그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여야 함. 공동체사회가 가지는 ‘가치’와 시장경제가 가지는 ‘에너지’를 결합해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가능함.
- 공동체사회발전을 외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앞세운 기존의 서울수도권모델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동반발전모델로 나아가야 함.
-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은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참여의 제도에 달려있음.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함.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함. 참여하는 주민들에 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성패가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의 극대화에 달려있는 만큼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절실함.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소통의 극대화하는 지역거버넌스주도(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s)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하거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역발전은 어려울 것임.
- 지역각계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이 가능함. 소통은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지역차원의 신뢰와 협력 문화는 산업, 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임. 지역각계의 협력과 신뢰 없이 지역의 미래는 없음.

-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지역거버넌스주도 시스템이 안착되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지방분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가능성이 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지방분권-지방자치의 선순환구조가 작동하게 될 것임.
- 지역거버넌스주도의 실현형태로 가칭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관련법 제·개정, 주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제도개혁부문, 의회, 언론, 시민단체 발전과 역량 강화와 협력,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개혁부문,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지역발전부문을 두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거버넌스주도방식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의지,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협력의지, 대학, 산업, 연구소 등의 참여의지가 모여 통합된 지역발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 교육, 금융, 유통, 주택건설, 의료, 문화 영역에서 비수도권의 부와 인재의 극심한 유출로 지역공동체의 붕괴, 지역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비전과 통합된 지역발전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할지 모름.
- 중앙집권체제를 깰 수 없다고 단념한 채 균형발전만을 현실적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집권을 고착화시킴. 중앙집권체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중앙주도 균형발전을 강조하게 되면 외생적 경제발전을 강화하게 됨. 지역혁신체제에 기반한 내발적 지역경제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임.

- 중앙집권체제를 깨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수도권 과밀을 막을 수 있음.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지방분권임. 수도권 과밀해결도 지방분권을 해야 가능함.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결과했다면 지방분권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함.
- 지방분권 개헌 이후의 균형발전은 수직적, 수평적 재정 조정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지방분권이라는 기반위에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함.

○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내용

-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함. 대한민국은 중앙집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골자로 하는 ‘87년 헌법’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어 국가발전이 정체되어 가고 있음. 이제 분권헌법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혼합을 내용으로 하는 하이브리드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해야 함.
-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통해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민주국가, 복지국가, 통일국가, 다문화국가 지향을 그 핵심내용으로 해야 함. 전문과 충강에 최소한 지방분권국가, 복지국가를 명시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치·행정·재정분권, 초광역분권특별도 도입, 중앙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상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포함해야 함.
- 우선 지방분권 개헌을 할 때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함.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는 규정을 해야 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지방분권국가라는 헌법 조항에 기초하여, 국방과 외교 및 거시경제정책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이 분권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함.
- 현재 정치권의 권력구조 관련 개헌논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이 대통령과 총리간의 분권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데, 중앙집권-수도권집중체제의 모순이 심

화되어 국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문제가 더 중요함.

-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분권차원보다는 지방분권 원칙에 따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분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 마찬가지로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입법권의 분권도 다루어져야 함.
- 지방분권 개헌의 또 다른 내용으로서 상원제를 도입하여 양원제 국회를 운영해야 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멈출 줄 모르고 2015년경에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역구 인구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소선거구제에서 구성되는 단원제 국회만으로는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명백함.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문제 관련 입법과 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상원을 둘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초광역경제권 단위에 상응하는 초광역자치도를 설치하고,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함.
- 현재 경제권과 광역자치단위가 상이하여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광역자치가 이루어지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광역자치권역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사회는 선진적인 지역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임.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지역민 스스로 지역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주권의식과 지역발전의지를 분명히 가질 때 지역의 밝은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임.